

본 연구는 국내 기후테크 산업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 분야를 선별하고 각 분야의 주요 위험과 해외 보험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산업이 기후테크 산업의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형이나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보고, 기후테크 기업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위험 관리·인수 측면에서 보험산업 및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국내 보험회사가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후테크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다양한 세부 기술 분야는 각자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다르고, 따라서 해외 보험상품의 사례도 다르게 나타났다. 사례들을 간추려 보면, 해외의 기후테크 산업 대상 보험상품들은 컨소시엄 구조를 지니거나, 기술 투입 원료에 대한 위험도 인수하였고, 사이버 위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였으며, 탄소크레딧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기도 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도 해외와 같이 컨소시엄 구조로 재보험사나 브로커와 협력해 보험상품을 도입하거나, 기술 투입 원료 또는 사이버 위험 관련 위험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자발적 탄소시장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탄소크레딧에 대한 피해도 담보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테크 산업의 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후테크 기술은 수요처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부가 직접 구매자로 활동하거나 수출 등 판로를 지원하여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가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업력이 짧은 기후테크 산업의 특성상 기술의 검증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거대 위험 또는 장기 위험을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같이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먼저 기후테크 기업들의 보험 수요를 조사하고 보험 수요가 낮다면 그 원인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보험 수요가 낮은 원인이 보험료 부담이라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방안이 될 수 있고, 기업의 니즈와 맞는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면 기후테크 산업의 위험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해외 보험회사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기후테크 기업의 보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산업이 위험 인수 측면에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